

또 ... 정쟁에 묻힌 '5·18 정신 헌법 수록'

“정신 계승하자” 외치던 여·야
5월 지나도 접점 못 찾아
대통령 공약도 원포인트 개헌도
정치현안에 밀려 기약 없이 표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경쟁적으로 5월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지금까지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어떠한 접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한 대통령 공약도, 원 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온 제1야당 대표의 제안도 결국 정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5월 민심의 저변에선 5·18 정신이 결국 여야 정치권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와 관련, “여권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에 대해서는 “당론 발의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당내 총의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헌의 카운터파트인 여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다 친명(친 이재명)·비명(비 이재명) 그룹 간의 갈등으로 민주당 내부 동력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주년이 마무리되면서 원 포인트 개헌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현안 이슈에서도 점차 밀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개헌은 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여권과의 공감대 없이 민주당만으로 원 포인트 개헌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제안한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이슈는 이제 당내에서도 점차 사그라드는 흐름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민주당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 각종 약재가 이어지면서 '5월 광주'에 내놓을 어떠한 혁신과 비전도 없었던 민주당이 원 포인트 개헌 이슈를 제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이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원 포인트 이슈'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여권의 외면이 예상됐음에도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30일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회 호남예술제 중창 경연에 참가한 승원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안의 당론 발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공약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 포인트 개헌안이 여야 간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호남 배려를 토대로 서진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번 원 포인트 개헌안 논란으로 스타일을 구경하는 평가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음에도 원 포인트 개헌 논란의 후폭풍에 5월 정신의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논리로 외면하고,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실망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헌 그 자체가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쟁점화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원 포인트 개헌안을 당론 발의하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월 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이 어렵다면 차기 대선에서라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여야 간의 공감대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결국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여야가 지역과 진영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협치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 '5·18정신 헌법 수록 추진본부'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기구 구성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나섰다. 또 5·18 50주년을 맞는 2030년을 준비하는 가장 '나들의 5·18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30일 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헌법전문 수록은 5·18에 대한 편협과 왜곡을 중단시키고, 그 정신을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이라면서 가장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아직은 구상단계이며, 앞으로 여야 정당, 5월 단체, 민주화단체 등과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

정에서 벌어진 일부 5·18 단체의 광주시에 대한 잇단 고소에는 “5·18의 주인은 나(해당 단체)다”라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과연 그렇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5·18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제안한다”며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광장’으로 나와 새로운 세대의 질문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5·18은 1980년 5월 시민군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애쓴 이들, 오월 정신을 이어온 민주주의자들, 지금의 우리까지 모두의 것, '나'들의 것”이라며 “모든 주체와 함께 2030년 50주년까지 5·18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기구인 가장 '나들의 5·18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아환자 휴일·야간에
비대면 초진 허용키로
의원수가 30% 더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던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한시 허용돼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 명 대상으로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과 함께 중단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여기서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2면

광주비엔날레 홍보 페미니즘·일베 논란 ▶6면

임의진 광주 순례기-윤상원의 천동마을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